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되었다. 30년 전인 1990년 제정된 교류협력법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한다고 한다. 1988년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7선언),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노태우 정부의 시대전환적 남북 정책을 법제화한 것이 1990년의 교류협력법 제정이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개정안에 꼭 반영되기를 희망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난 5월, 공청회 때 공개된 개정안에는 접촉 신고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남북교류협력법에 남북 관계의 비전을 담아야

있었는데,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빠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접촉은 남북, 교역, 협력 사업과 같은 다른 교류협력 행위의 전제가 된다. 현행 교류협력법과 같이 모든 북한 주민 접촉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의문이다. 해외 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 주민과의 만남, 이산 가족이나 북한 이탈 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외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 목적을 위한 연구 활동 등 모든 접촉은 현행법상 신고의 대상이다. 법이 제정될 당시인 1990년에는 모든 접촉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 혁명 시대이다. 인터넷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을 읽거나, 북한 주민의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까지 위법 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늘의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접촉 신고의 완화 또는 폐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통일부의 접근이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이에 대해 우리 사회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 발전의 비전을 갖고 주무부처가 선도적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류협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남과 북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고 강조하였다. 어떻게 해야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지, 통일부가 반대하는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최근KBS에서 보도된 외교부의 이견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느낀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제1장 총칙과 관련된 조항에 국제사회 제재 상황을 고려한 전제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수정안을 제시한 이유는 '개정안 일부 내용의 경우 현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교부가 이 같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 타당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인 교류협력법이 제재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재의 대상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

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와 관련된 일반 총론을 법률에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속박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 방북, 물품의 대북 반출·반입 등 모든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협력 사업이나 반출·반입 승인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고려하여 결정해 왔다.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시나리다 싶을 만큼 미국과 세세하게 협의하고, 제재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외교부가 교류협력법 총칙에 대북 제재를 고려하는 조항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대미 사대주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우리 법과 제도 안에 담아내어, 향후 남북 교류 협력을 견인할 새 그릇이 필요한 시점이다. 3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교류와 협력 사업이 법적인 뒷받침 아래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성과도 있었다. 교류협력법이 변함없이 미래의 남북 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하루는 조송광이란 사람이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박종빈 1891~1943)를 보러 왔다. 대종사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가 답하기를 "여러 십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해 온 예수교 장로입니다." 문답은 이어졌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시고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셔서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늘 하나님을 뵈옵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뵈옵는 일도 없고 말하여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의 심통(心通) 제자는 안 된 것이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뵈옵 수도 있고 가르침을

마음이 통하는 성자

받을 수도 있습니까?" "당신이 공부를 잘 하여 예수님의 심통 제자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다시 오시되 도둑같이 왔다 가리라 하였고 그때에는 여러 가지 증거도 나타날 것이라 하였사오니 참으로 오시는 날이 있습니까?" "성현은 거짓이 없나니 당신이 공부를 잘하여 심령(心靈)이 열리고 보면 예수님이 다녀가는 것 또한 알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를 직접 지도하여 주실 큰 스승님을 기다렸더니, 오늘 대종사를 뵈오니 마음이 흡연(洽然)하여 곧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절(變節) 같아서 양심에 자극이 됩니다." "예수교에서도 예수님의 심통 제자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심통 제자만 되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저 교의 간격을 두어 마음에 변절한 것 같이 생각하고 교회 사이에서 서로 적대시하는 일도 있지마는, 참으로 아는 사람은 때와 곳을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요 다 한 집안으로 알게 되나니, 당신이 가고 오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조송광이 일어나 절하고 제자 되기를 발원하자, 대

종사께서 허락하며 말하기를 "나의 제자 된 후라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라고 말하였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종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면 성자의 본의(本意)를 생각하게 된다. 모든 종교는 동원도리(同源道理), 곧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 서로 대화합(大同和合)하자는 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종교와 종파가 한울 안한 이치임을 알아 동도일원(同道一圓)하자는 것인 바, 모든 종교의 최고 진리가 하나임을 알리려고 깨우쳐서 서로 남나고 화합하는 상부상조 상신상락(相信相樂)하는 불국의 세계, 선경의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인(聖人)의 심법(心法)이란 서로 갈라서 생각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다. 그 마음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들께서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서로 편을 가르거나 차별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즉, 원래가 하나이니 하나 되어 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종교 신자나 성직자들이 자기 중

교의 경전을 인격하며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성자의 본의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편을 가르고 차별을 하는 성인이 있다면 그 본은 결코 참다운 성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날, 상징적인 성인의 탄생과 그 법을 기리는 날에 목사님과 신부님, 스님과 교무님이 서로 축하도 해주고 성당이나 법당, 교당에 방문하여 서로 교류하고 축사를 해 주며 그 기쁨의 시간을 서로 소통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가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내빈이라고 참석하여 예배나 법회 의식 중에 다른 곳을 본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하며 배척하는 모습에 불편함이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우리는 각자 지금 종교가 있든 무종교인이든 타 종교에서 받들고 신앙하는 성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또한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과도 사이 좋게 지내며 그 종교의 훌륭한 점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통하고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이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社說

코로나 대확산 위기 방역 총력전 나서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재확산은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최근 며칠 사이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와 달리 이번 재확산이 심각한 이유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가 아닌 생활 시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주일 동안 순천에선 대형 쇼핑몰과 휘트니스센터를 중심으로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근 광양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에선 어제와 그제 이들 사이에만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 감염원인 성립집례교회 외에도 학교와 경찰 지구대, 시내버스 운전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어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2단계가 다중 시설에 모이는 것을 '제한'한 것이라면 이번 조치는 아예 '금지'하고 어길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상은 'n차 감염'의 발원지인 교회 등 종교 시설은 물론 실내 체육시설, 놀이공원, 사우나 등이다. 학원도 10인 이상 모임 수 없도록 금지해 사실상 3단계와 맞먹는 강력한 조치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확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내린 것은 방역의 마지막 골든 타이임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주말이 사실상 대확산을 막을 마지막 고비인 만큼 방역을 관계 당국에만 맡겨 뒀선 안된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집합 금지 기간인 향후 2주 동안은 모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집안에 머무르고 외출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신속한 신상 파악을

광주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까지 북구 각동성림침례교회 신도 등 31명이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등록됐다. 방역당국은 광주 284명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가 최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 세 차례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수도권발 집단 감염의 주된 고리가 된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광주시가 파악한 집회 참가자는 모두 222명으로 이 가운데 140명은 검사를 완료했으나 29명은 신상 파악은 물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받는다"며 검사를 피하는가 하면 단체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와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가운데 광주 248명 확진자와 같은 감염원이 또 나올 수도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10명이 확진을 받은 상태다.

광화문발 감염 사태 확산의 원인으로 광주시의 단일한 대응이 지목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대규모 집단 감염을 우려해 초기에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려 총력을 쏟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지난 21일에만 명단 확보에 나서는 등 느장 대응했다.

이제라도 광주시와 경찰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접촉자들의 신상과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하는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기고

지금 당장 자연 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양성관  
동강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거나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24시간 돌아가던 공장도 주간만 가동하거나 멈추었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도 부분적 등교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비대면 강의로 바뀌었다. 대형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한 예배실마다 50명으로 제한하여 등성등성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주말이면 줄지어 몰리던 등산객들의 모습도 띄엄띄엄 보인다. 운동 경기나 음악회도 관중이나 관람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면 금년 봄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미세먼지의 고통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외출 후 손을 씻고 마스크

를 생활화하여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과학자가 아니고 의사도 아니다. 그 원인을 중국 우한에서 무차별하게 야생 동물을 잡아먹은 것으로 보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나는 코로나의 원인을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로 본다. 완도 명사십리에 1980년대에 설치된 해안 도로가 모래 유실을 심화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면서 도로를 철거한 후 모래를 원형 복원한 적이 있다. 1996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인공 조림 지역보다 자연 상태로 놓아둔 곳이 훨씬 더 건강한 숲으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인위적으로 파헤친 4대강 사업이 강과 생태계를 죽이고, 이번 홍수 피해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연은 자연 그 상태로 놓아두면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듯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여 자연이 더 이상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에 인간에게 외치는 절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의 절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

첫째는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를 보존하고 자연 파괴를 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 시내 중심지에 아파트는 그만 지어야 한다. 녹지대나 바람길을 막아며 고층 아파트를 지어 도시의 숨통을 막아 버리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경성북도 경주시는 도심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한다. 불행사나운 아파트 없이 벚꽃으로 만개한 경주의 봄은 얼마나 아름다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내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니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다. 미래에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공원 부지는 절대 보존되어야 한다.

둘째는 무분별한 자연 파괴를 막고 환경 보호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년 여름에 50일이 넘는 역대급 최장 기간의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자연 파괴에 대한 비명이라고 생각한다. 펜션과 별장 등의 난개발로 인해 폭우의 방향이 바뀌어 마을 전체를 쓸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자연을 파괴하게 되면 기상 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주기가 더욱 빨라지게 되고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는 광주를 그린 에너지 선도 도시

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의 주범인 화석 연료 사용을 중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의 비중이 높다. 대한민국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율이 4%에 불과한 반면 화력발전소 발전율은 68%에 달해 세계에서 환경 파괴의 주범국으로 지탄받고 있다. 광주가 앞장서서 그린 뉴딜 정책의 선도 도시가 되어야 한다.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빠르게 바꾸어 디젤이나 휘발유 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을 없애야 한다. 공장마다,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태양 전기 시설을 갖추어 전기를 만드는 화석 연료의 환경 오염(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린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코로나 19 환자가 300명에 이르면서 방역당국은 다시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살기 좋은 지구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자연 파괴 행위를 멈춰야 한다. 자연 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모습의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나 자연재해가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無等鼓**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는 말이 있다. 판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과 심판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오심은 손을 사용해 골을 넣은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 오심으로 눈물을 삼킨 잉글랜드의 불운은 2010 남아공 월드컵 독일과의 16강전까지 이어졌다. 램파드의 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을 넘었는데 심판의 판정은 노 골(no goal). 중계방송 리플레이 화면을 통해 전 세계 관중들은 완벽한 골 상황을 보았지만 유독 심판만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 경기 뒤 국제축구연맹은 골라인 판독 제도를 도입했고,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인 VAR(Video Assistant Referees)이 시행됐다.

야구에서는 판정 시비가 더 자주 발생한다. 2010년 6월 2일 미국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디트로이트의 선발 투수 갈라라가는 9회 2사까지 타자들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27번째 타자가 친 공은 1루 쪽 땅볼. 투수가 베이스 커버에 들어가며 대기록이 달성되는 순간에 1루심이 돌연 세이프를 선언

했다. 여러 각도의 리플레이 화면을 돌려 봐도 확실한 아웃이었고, 타자 주자조차도 당황하며 머리를 감싸 질 쥘 정도였다. 그러나 오심 하나로 퍼펙트 경기는 날아갔다. 당시 1루심이었던 짐 조이스는 다음날 수만 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내가 죽으면 부고 기사에 '퍼펙트 경기를 망친 심판'이라 나오겠조"라며 비통해 하자 갈라라가는 "누구도 완벽할(perfect) 수 없다. 난 퍼펙트 경기보다 값진 것을 얻었다."며 심판을 위로했다.

이 사건 후 메이저리그는 '챌린지'로 불리는 제심 제도를 도입했다. 박빙의 경기에서는 판정 하나가 흐름을 좌우한다. 하지만 심판도 사람이다 보니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지난 22일 KIA-키움전에서 김호령의 호수비를 2루타로 만든 심판 판정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심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KIA의 도둑맞은 승리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 다만 이 사건이 비디오판독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선수나 팀의 능력이 아닌 심판의 능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오심과 VAR**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문 신형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